

사설

환자의 생명이 첫째다

경희의료원 전공의가 가운을 벗은 지 40여 일이 지났다. 교수들도 사직을 결의하며 의료원을 떠날지도 모른다. 의사의 빈자리는 간호사가 메꾼다. 아슬아슬한 법의 경계 속에서 말이다. 간호사들은 휘청이는 병원의 재정에도움이 되기 위해 ‘무급휴가’까지 사용한다. 가뜰이나 무거웠던 업무가 더 버거워졌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경희의료원 이은영 지부장의 말처럼 병원은 ‘초토화’ 상태다.

의료연대에 따르면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사 부족으로 많은 병원은 병동을 통합, 폐쇄하면서 병상 가동률이 50% 안팎까지 떨어졌다. 전체 의사 중 전공의 비율이 40%에 달하는 경희의료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병상 가동률은 ‘반토막’ 났고, 수익도 60%대로 급락했다. 김성완 의무부총장은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
너무 많은 국민이
의료 대란의 피해를 봤고
불안을 느끼고 있다.”

조만간 자금 경색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고 더 길어진다면 의료기관의 존속 여부를 걱정해야 할 중차대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서신을 의료원 직원에게 보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났으니, 상황의 심각성은 더 커졌을 터다.

유례없는 상황의 직격타를 맞은 이들은 위태롭게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들이다. 이들은 병원이 정말 무너지진 않을까 싶어 무급휴가를 사용했다. 일주일 임금 100만 원이 사라져도 어쩔 수가

없다. 정작 병원을 떠난 건 전공의인데 묵묵히 현장을 지킨 간호사들이 피해자가 된 아이러니가 쓸쓸하다. 주휴 수당을 기대하는 것 역시 사치다.

떠나간 전공의의 일까지 떠맡으니 업무 가중은 물론, 행여나 불법 진료는 아닐까 노심초사다. 지난달 27일부터 정부가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 수행 업무 범위를 결정할 수 있게 됐음에도 여전히 두렵다. 기관 삽입 등 간호사가 할 수 없는 업무가 대거 포함된 허술한 지침 탓에 일부 간호사는 또다시 무급휴가를 선택한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정부와 의사의 싸움에 간호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오히려 고발이라도 안 당하면 다행이다. 공공의대 설립 등 지난 시절의 파업에서 일부 전공의가 간호사들이 업무권을 침탈

했다며 고발한 것처럼 말이다. 지난해에는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 일부 의사들이 파업까지 했다. 그런데도 간호사들은 병원을 지키고 있다.

더 이상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정부와 의사의 갈등이 봉합돼야만 한다. 이미 너무 많은 국민이 의료 대란의 피해를 봤고, 불안을 느끼고 있다. 정책과 관련된 양 집단의 싸움 정도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생각해야 한다는 당위를 잊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본인들로 인해 생긴 간호사의 피해와 노고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자들의 싸움에 애민 피해자가 생기는 우리 사회의 병폐가 지속될 것이니 말이다.

세시봉

공약 메가도스

조병연 기자

choby0309@khu.ac.kr



얼마 전 친구와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뜨기 전, 친구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더니 물과 함께 들이켰다. 영양제였다. 그는 건강 관리를 위해 여러 종류의 영양제를 하루에 무려 40여 개나 먹는다고 고백했다. 요즘 유행이라는 ‘메가도스(Megadose) 복용법’을 눈앞에서 보게 됐다. 메가도스 복용법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비타민을 권장량 이상 섭취하는 것이다.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이 지금 ‘공약 메가도스’를 하고 있다.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여러 영양제를 먹는 것처럼 공약을 내세운다. 정책의 영향을 깊게 고민하지 않은 채 지지율에만 급급한 공약-구호를 남발하는 것이다. 표심만 움직일 수 있다면 수도룩한 공약을 진지한 고민 없이 발표할 수 있을 것만 같이 보인다.

필요 이상의 영양제가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처럼, 공약도 그렇다. 단순 현금성 지원, 감세 공약은 경제적 악영향과 정책의 실효성을 간과한 공약이다. 표가 급하니 안 먹던 약을 꺼내기도 한다. 얼마 전 나온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도 뜬금없다. 이미 세종시에 부지가 마련돼 있어 새롭지도 않을뿐더러, 이에 가장 소극적이었던 당이 내세웠기 때문이다. 국회 이전으로 개발 규제를 풀어 지역 부동산 소유자의 표심을 자극하는 선거용 공약으로 보인다.

그들의 고민은 유권자가 아닌 오직 선거 승리에 맞춰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례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위성정당 창당과 ‘의원 꺾주기’ 등의 꼼수는 여전히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태다. 또 특정 정치인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의 이른바 ‘자객 공천’은 지역구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공약은 승리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부작용은 논외다. 선거를 앞두고 불쑥 내놓는 ‘벼락치기’ 공약과 과도한 선심성 공약이 매일 새롭게 들려온다. 이러한 ‘공약 메가도스’는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 뻔하다. 그들은 정당 메시지 하나하나가 시사하는 책임을 깨닫고, 신중하게 공약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도 총선에 앞서 유권자들을 위한 고민의 흔적이 공약에 얼마나 녹아들었는지를 후보자 선택의 척도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강사 처우, ‘교육’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대학의 그림자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학교에 다니며 수많은 교수를 만나고 또 지나친다. 이들 교수 중 32%는 강사다. 또 이들 중 절반은 전업 강사로서 2개 이상의 대학에서 강의하며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강사는 학생을 가르치고 전문적인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의 지위를 갖는다.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것처럼 ‘교육·지도 및 학문 연구’가 강사의 임무인 것이다. 우리학교 전체 교원 중 32%가 강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학교는 교육의 일정 부분을 이미 강사에게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강사 수는 63% 증가했다. 학생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강사는 교육의 질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교의 투자를 받고, 이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

교원의 32%를 이루고 있는 강사의 처우 문제는 ‘교육’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강의를 준비하고 주 5시간 강의한 강사는 그 2배인 10시간을 강의 준비와 평가에 할애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법원의 판례도 있다. 강의계획 수립, 성적처리 등 강의를 준비하는 기간인 방학 동안 강사 업무를 인정하고 이들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강사에게 지급되는 방중임금은 2달 중 2주뿐이다. 머물 수 있는 공간, 재정적인 지원 등이 학교가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이다.

등록금 동결 16년째인 상황에서 대학에만 일방적으로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부당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강사 처우는 강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강사가 제공하는 교육은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간다. 학생의 수업권을 위해서라도 강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학교의 능동적인 노력은 요원한 것일까.



만평 강사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경희대학교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이지수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솔디자인 | 인쇄 옴니퍼먼티